

제334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국회 사무처

2015년6월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정치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정치에 관한 질문 1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대상 국무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은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광진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6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국가 자존심이 뒤흔어지고 서민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되려면 지도자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레이건조차도 ‘이 위대한 국가가 못난 지도력 때문에 자멸해 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쁜 지도력 때문에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심지어 국민을 향해서까지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시작하고 국민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국민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을 외치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민통합형 인사도 아니고 국민의 신망을 많이 받는 분이 아니신데 왜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총리의 그간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 박 대통령께서 왜 뽑았는지 알 만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떨고 있는데 총리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아쉽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아부성 답변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총리의 이 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1번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알렸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도화선이 된 그날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평택성모병원에 공중보건의 2명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불안을 야기하니까 메르스의 ‘메’ 자도 꺼내지 마라. 마스크만 쓰고 정상근무하면 된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일부 언론 보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총리, 이게 감염병 담당 기관이 해야 될 말입니까? 누가 그랬는지 철저한 진상조사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튿날 환자 스무 명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퇴원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자체격리에 들어가기 위해 휴원하겠다고 하자 정부 당국자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수건 돌리기 하듯이 책임만 미뤘고 결국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은 정부의 지시만 따르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리, 범을 몰랐다고 무죄가 되겠습니까? 감염병 감염을 책임져야 할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메르스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초기에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또 초동조치가 미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대처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슈퍼전파자 뒤에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병을 확산시킨 주범입니다. 정부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무더기로 환자를 내보내게 하는 바람에 슈퍼전파자가 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병원의 입원환자들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내보내고 환자에 대한 병원 간 정보 공개 등 초동조치조차 하지 않은 그런 정부가, 도대체 어떤 나라 정부가 그런 정부가 있단 말입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을 포함한 그런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초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매우기 위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한 시간 안에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총리, 메르스 사망자가 현재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179명, 오늘 아침 7시 현재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메르스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희생자는 화장장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로 죽은 환자는 죽은 후에도 제대로 사람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총리, 메르스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이 있어도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아도 보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해 보았는데, 복지부를 중심

으로 해서 일선에서는 일단 장례 지침대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다른 절차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화장장에서 기피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사체가 물건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총리,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메르스는 진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대처를 해 오고 있었고, 안전처에서는 이런 복지부의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범정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면서 복지부를 지원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했지요, 안전처가? 총리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셨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실제 현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치료받을 곳이 없다라고 난리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처간 병원들의 중환자들과 투석 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환자가 필요할 때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추미애 의원** 총리의 부모님이라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환자에게는 그 생명이 전부 다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까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허수아비 안전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

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처가……

○**추미애 의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드리고 있는데도……

질문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안전처가 생긴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미애 의원** 국정을 연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국민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습니까?

메르스는 외래 수입 전염병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형 무능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코르스가 됐습니다, 총리님!

총리, 세월호 이후에 1년이 더 지났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 대통령의 불통, 결국 민간에게 책임 전가로 끝나 버린 세월호 프레임이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삼성병원장을 불러 야단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세월호 사건을 죽은 유병언 탓으로 돌리고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 또다시 절망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태 종식되면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정부는 처음에 메르스가 낙타 탓이라고 했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오니까 국민 탓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없는 국민의 간병 문화가 감염병을 키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경쟁에 내몰린 병원에 간병 인력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의료공공성을 무시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탓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공의료의 역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국가가 뚫렸다는 것은 공공보건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너졌다 하는 뜻입니다. 민간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자 소

수 몇 곳의 공공의료만이 앞장서서 환자를 돌봐줍니다.

총리, 이러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의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추구하는 관련법들을 정부는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의 방침도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결국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면 국민건강 개보힘 원칙이 깨진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예, 믿겠습니다.

총리,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와대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총리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개탄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봤습니다.

○추미애 의원 10년 후 대통령이 되신 지금에는 180도 태도를 바꾸어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국회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료를 봤습니다.

○추미애 의원 이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들을 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의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정중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2015년판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원론’, 학생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저서에는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중섭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써 놓은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그런 소신이 일반적이다라는 물타기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행정자치부장관 정중섭 그것은 아니고요. 제 헌법 책에는……

○추미애 의원 장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소신이 바뀌고, 책에서는 일반론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아는 정중섭 장관님의 모습은 아니시지요? 저와 연수원도 같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장관 정중섭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추미애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잠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입법의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총리,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이 국민과 국가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슬픔을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추미애 의원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고 실제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겠다고 하니깐.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예방방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를 따져 보지도 않고 시행했고, 이번 가뭄에서 4대강 보에 수억 t의 물이 철철 넘쳐나도 인근 지천의 강물은 마르고 지하수마저 고갈시켜 놔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도 관피아를 허용해 준 정부의 시행령이 문제였습니다. 수명이 다 된 중고 선박에 운항허가를 내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 해양수산부 본부장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의원 국회에서 원래 만든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협력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률 취지를 전면 무력화시켜서 국가사무위탁협회에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시행령이 관피아의 유착을 만들었고 세월호라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총리, 그랬으면 이제라도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세월호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유족들 또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행정입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을 통한 경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추미애 의원 아직도 핵심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유족이 무엇을 주장하고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당초 국회에서 만든 법 취지와 다르게 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예산을 대폭 줄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보직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는 검찰 서기관을 파견하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피해 가십니까?

총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비상 사태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시기에 청와대가 정쟁의 불을 지핀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그런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답답합니다, 총리. 제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며칠 전까지 직전 법무부장관이었고, 이 문제만큼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사례를 조목조목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심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

○추미애 의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심기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총리가 되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총리라는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ocation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화면 보고 계십니까?

고 성완중 씨가 대통령 당선으로 환한 웃음을 짓는 박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성완중 리스트의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이병기 서병수, 이 6명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캠프 핵심 관계자였거나 전·현직 비서실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건네진 돈은 당연히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성완중 리스트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

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수사 잘 못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지요.

총리, 이들 6인에 대해 계좌추적 하셨습니까? 계좌추적부터 시작하고 소환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고 정석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수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검찰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질문을 안 듣고 답변하시네요. 상식에 어긋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방법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정파와 정치적 증오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민통합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안과 갈등을 제거하고 모두를 화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이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일성의 6·25 남침이 있는 지 6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오로지 피로써 이 나라와 자유를 지켜 주신 호국영령의 돈독한 애국 혼이 가슴깊이 사무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메르스가 덮쳐서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고 기나긴 가뭄은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우리 국민 모두가 비탄에

젖어 있다가 이제 겨우 헤어나려고 하는 때에 메르스의 창궐로 다수의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또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아직도 가뭄에 속절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4차 감염자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이한성 의원 이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대단히 참 당혹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휘권이 없다, 인사권도 없다, 예산권과 전문성이 없다, 이런 문제를 안전처에서 좀 짚어 보았습니까?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7개월 되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전반적으로 좀 짚어 볼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막상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대단히 참 허점이 많은 질병관리본부였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2항, 그다음에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재난 전담 관리기구인—감염병에 대해서—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 역학조사 그다음에 방역대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는 고난도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어느 1개 부처와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6월 3일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가동을 시켜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장관이 또 본부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중앙부처하고 광역단체, 지자체하고의 수직적 협업, 그다음에 중앙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민간 부분하고 정부하고의 협업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12월 달에 또 학자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작년, 1년 전이지요, 1년 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전염병 포럼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메르스를 지적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이것이 나타나서 대단히 심각하다. 이것이 꺼지지를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런 지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질병이 무슨 천안함 폭침 때나 또 세월호 참사 때나 또 이번 메르스 사태 때나 그냥 여지없이 반복되는 것, 이거 어떻게 고질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을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감염병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표준 매뉴얼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 실무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되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요새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뭄 논에 비가 왔을 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양의 비가 와야지 논에 물이 고이지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또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보고 분발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장관님,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어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데 또 2003년도에 사스는 잘 또 방어를 했습니다, 또 신종플루도 잘 하고. 그런데 메르스에는 지금 이렇게 무대책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사가 중동으로 가는 항공승객에게 메르스 이야기 경고 한 마디 없었어요.

전혀 그냥 무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1번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기관을 쫓아다니는 동안에도 메르스하고는 전혀 관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메르스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무슨 ‘열두가지 질병 한번 다 체크해 보라’, ‘아마도 그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태만하게 대처했다는 것, 인식이 도대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희 국민안전처에는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이것을 유심히 보면서 또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면서 지금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물론 조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참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런 국민적 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총화단결이 좀 필요하다, 행동 통일과 자제가 좀 필요하다……

사실 떨어지는 시민의식,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물론 초기에 자가격리를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 지원대책본부에서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불안감과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데—물론 잘못된 분도 계시지만—그런데 격리당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민안전처하고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팀에서는 일체의 그분들한테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말씀을 드려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은 또 좀 격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지난 6월 16일이 자가격리자가 5910명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았는데 그 인원을 갖다가 어디 준비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갖다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도 다하고, 사실 저희들은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성 의원**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에볼라가 작년에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에서 창궐했을 때,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를 발전이 좀 더딘 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이지리아는 에볼라 환자가 28명이 발병하고 그중에서 8명이 사망한 선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웃 나라가 전부 다 에볼라로 수백 명이 죽어갈 때 불과 28명 발병에 8명 사망 이걸로 나이지리아는 에볼라를 방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세네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단한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 잘 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이런 방역 시스템을 보면 국민적인 협조와 또 국가의 대대적인 강력한 조치 이것이 함께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식도 없고, 도대체 대응도 느려 터지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서 이렇게 결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앞으로 아마…… 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대형 병원에 있는 슈퍼박테리아, 병원에 지금 슈퍼박테리아가……

우리나라가 하도 항생제를 마구 쓰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가 틀림없이 번창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알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추미애 의원님하고는 연수원 동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공부를 누가 더 잘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우리 추 의원님이 더 잘하셨습니다.

○**이한성 의원** 헌법 교과서에 국회법 관계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현재 국회법 돌아가는 상황하고 좀 다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제대로 한번 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아침에 제가 급하게 무슨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책에 써져 있는 이론은 그 이론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무슨……

○**이한성 의원** 그대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아

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약간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셔야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현재 저희들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그런 통보제도가 있는 것이고, 통보에 대해서 부처 장관은 그 조치한 것을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한성 의원** 또 헌법 전문가이시고 총리께서도 법률가이시니까 잘 국회법을 해석해서 좀 원만한 결론이 나면 참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또 국가안전처 여기에 비정규직도 많고 전문가가 없고 또 지위는 1급 공무원으로 책임자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점에 대해서 마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직을 좀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제가 보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병언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는 정부조직권을 제가 행사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본체도에 올리는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전문가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했고 법의관들을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르스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개혁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입장이 바뀌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조직권을 행사해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질병관리본부가 이제까지 좀 취약했고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깊이 좀 감안해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책임론도 함께 좀 다뤄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제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을 잘 보좌하신 점이 인정돼서 법무부장관에서 다시 또 총리로 되셨는데 특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고 또 행정 각부의 그런 이해관계 문제, 업무를 잘 조정해서 혼란스럽지 않고 능률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내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경청하고 특별히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추미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리스트에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으면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위를 불문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광범위한 내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범위의 제한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 안 나오게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모든 의혹 사항에 대해서 심층 수사를 해 가지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찰에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겠다, 사실 확인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간 한 1270mm 정도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한성 의원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만km²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1m 27cm 비가 옵니다. 그것을 용량, 부피로 환산하면 한 1270억t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 3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 늘 아쉽고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이 대책이 좀 서 있습니까?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후속대

책이 없어 가지고 이게 하다 만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을 개발한다든지 그것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4대강 사업 할 때 하천 바닥에 수십 년 동안 퇴적된 것을 긁어내서 저수량도 확보하고 이렇게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후속적인 그런 지천·지류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바람에 하천 바닥이 초목이 자라 가지고 무성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는 이런 것조차도 이것이 생태계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하천 바닥인데 말이 되는 겁니까? 저게 지금 현재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천은 처음에는 물이 흐르다가 그다음에 좀 모래가 쌓이다가 그것이 자꾸 높아지면 건조해지면서 풀씨가 내려앉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무성해지는 겁니다. 저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긁어내서 복구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자체 해당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습니다마는 국가와 같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그런 전반적인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빨리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더욱 촉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총리님께서서는 이게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드리면 전부 다 당장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너무 환경 위주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진척이 더디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국무조정을 통해서 환경단체를 산하에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또는 농식품부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해도 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국무조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유념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오기 때문에 수량으로 치면 대단한 양인데 이것이 여름철에 그냥 한꺼번에 와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지하로 저장되는 양이 적고 가물 때는 그것 다 굵어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현재 지하 대수층이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개울물이 흘러가던 것이 지금은 다 말라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지하수 과다 사용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소규모 댐이라든지 초대규모 댐을 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 여러 군데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에 한 200군데 이상 댐을 건설했는데 우리는 고작 한 20여 개 갖다 말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이달 말에 아마, 6월 말인가 7월 말인가 즈음 돼서 탄소배출량 계획을 아마 유엔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계에서 워낙 거센 저항을 받아 가지고 대폭 배출량을 감소한 안을 내놨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내용은 것이 1안은 14.7% 또 4안이라고 해 봐야 31.8%인데 이것은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언하신 그런 대폭 감축량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 정말 이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대단히 불만스럽고 '1안도 가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가 사회에 제시한 202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기업계에서 자꾸 '어렵다' '이러면 경영이 어려워져서 수출도 못 하고 차라리 그냥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참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벌써 한 30%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언하신 이후에 아무런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기업계도, 재계에서도…… 사실 법인세도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기술혁신이라든지,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별로 한 것이 없고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왔고 작년엔 비로소 좀 줄어들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도 설득을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값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배 정도 비싼 경제환경, 거기다가 또 노동환경도 얼마나, 아마 우리보다 규제가 심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규제 우리보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은 규제를 다 꺾어가면서도 오로지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재계에 좀 촉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 그런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기준에 맞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대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하여튼 현재 제시한 감축량에 대해서 제4안도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대폭적인 그런 감축량을 좀 과감하게 수립해서 국제사회에 하고 재계에 촉구해서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하고 우리가 석유를 수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량 국민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대량 수입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석유화학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탄소섬유 분야 또 C1…… 분자식 중에서 C가 하나인 것…… C가 2개인 것은 에탄올, 에틸 이렇게 나가고 C가 하나인 것은 메탄아닐니까, CH4?

이런 가공기술이 현재 국제적으로 대단히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역량을 점검하고 이를 중흥으로 연결하여 빈틈이 생긴 곳이 있으면 보완하고 재결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서민의 동네,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먼저 그 메르스가 뭐라고 그 메르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고인들과 그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179명이 되었고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메르스 확진자 여러분들이 완치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존경과 감사의 뜻도 표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만 만지지 않았다면 별일 없는 감기 수준’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재난이 일었습니다, 안일한 정부의 대처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야당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이 나서자 이제 조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가 되셨습니다.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르스 언제쯤 종식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이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 민간의 역량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런데 언제 종식될지 예측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 환자 처음에 알았다면 금방 종식됐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처음 예방이 잘 됐으면 또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왜 처음에 못 막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지……

○**서영교 의원** 1호 확진자를 왜 처음에 못 막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처음에 확진이 됐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염이 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소한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생소한 질문이지요?

1호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삼성병원에서 질병재난본부를 향해 ‘이 사람 메르스 같아요. 확인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언론에 나왔고 법사위에서 질의했는데요. 체크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왔을 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같으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다시

그래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열두 가지 호흡기 증상을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돼서야 '정부에 높은 사람 있는데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검사를 했고 메르스 확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모르세요, 이 내용?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5월 20일 날 환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 6월 24일이 되어서 우리 총리께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대처해야지요.

제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예측을 못 해요. 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왜 시작했느냐 하면요, 농친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부가 처음에 이것은 매뉴얼에 없다며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레인 갔다 온 사람은 메르스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삼성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정부에 있는 겁니다.

화면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 책임이다' 세종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저도 내 책임이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야. 그게 임금이야.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임금이야'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 가 계시고 우리 총리께서는 왜 1번 환자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왜 아무리 정부 쪽에 물어도 보건복지부는 '잘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시작을 똑바로 얘기하고 공개하고 잡아내야지요. 그래야지 그다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현실이에요.

책임을 묻겠습니까? 찾아서 답변해 놓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동안에 문제된 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의원** 제가 조언할게요.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아무리 뒤에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시작이 이랬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이, 메르스가 아니라고 돌려보낸 사람이 아직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발각될까 봐 설설 기고 별벌 떨고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장관, 당연히 메르스 종식시키고 사퇴해야지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총리 하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총리는 뭐하십니까?

어제 대면보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면보고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임명장을 받고 바로 국회에 와서 오늘까지 이려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갈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 틈틈이는 사실은 메르스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다녔습니다.

○**서영교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미뤘어요. 미루시고 뭐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메르스에……

○**서영교 의원** 동대문에 가서 핀 사야 하고 눈에 가서 소방 호스로 작은 모를 향해서 직격 물세례를 퍼부어야 그게 대통령이 하실 일이신가요?

대통령을 모시세요.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시지요. 이렇게 하자,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 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방침을 가져오십시오.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되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왜 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들어 주세요.

황교안 총리 청문회 거쳤는데 안타까웠어요. 저는 법사위라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병역 면제,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전관예우,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사면, 사면이 대논란인데 알선수재 의혹의 사면 사건을 수임했어요. 인사청문회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증여세는 내일 인사청문회면 오늘 납부했어요.

편향된 역사의식 있다 그러지, 공안 전문가라 그러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했다고 그러지, 17억 전관예우 받았으니까 기부한다 그러더니 절끔 기부했다 그러지…… 아니, 이라고 나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좀 멋졌으면 좋겠어요. 멋졌으면 좋겠는데 총리가 멋진 게 아니라 이런 하자가 있었어요. 반만 찬성하는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저희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저희는 가슴에 담고 있지만 일을 해서 복원시켜서, 오늘도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가족에게 감염되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에서 ‘경계’로, 그 위로 올려야 하는데 왜 올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국민만 고통을 받게 놔두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 수준에 관해서도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말씀은 참 잘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다니깐요.

화면 들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보십시오.

2004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이를 악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다음 넘겨 주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스 사망자 몇 명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사스 사망자가 349명 발생하는 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산하에서 사스 대책으로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많은 컨트롤타워로서 매뉴얼들을 다 없애 버리고 NSC까지 없애 버리고 나더니 신종플루 260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로 지금 사망자 27명입니다. 중국에선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장관?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몇 명일 것 같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총리실은 뭘 보고하는 겁니까, 우리 총리께? 컨트롤타워가 되신다고 일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은 뭘 하는 겁니까? 뭘 보고하는 겁니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중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발이요, 제발.

(「환자가 몇 명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환자도 없어요. 다 막아 낸 것이지요. 그걸 모릅니까? 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 막아 낸 것이지요. 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환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 냈어야지요. 한 명 나왔을 때 막아 내든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는 의원 있음)

(「누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적당히라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리는 6월 19일 날 컨트롤타워가 돼서 모든 걸 지시한다고 했어요. 6월 20일 토요일이에요. 총리가 말한 다음 날인데 우리는 반갑게도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그날 환자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6월 20일 삼성병원에서 오후 3시경 확진환자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날짜를 다 기억 못 하겠습니까마는 적은 숫자의 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황교안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내가 다 막겠다’,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한 다음날 공교롭게 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확진환자가 3명 발생했다고 했어요. 6월 20일에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는 그것을 몰랐는지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하나 새로운 사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260여 개에 달하는 매뉴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NSC를 후루룩 찢쩍쩍 없애 버린 매뉴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몰랑, 가슴이 아쁩니다.

자, 총리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6월 말 메르스가 종결되면 우리나라 손실이 그나마 몇 조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추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않고 상당히 큰 경제적 또 사회적 손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8월 말까지 종식되지 못할 때는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얘기도 하고 20조 얘기도 하십니까마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 아시아 쪽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서영교 의원** 아시아 쪽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왜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오늘부로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볼까요?

누가 그렇게 손해를 볼까요?

20조 이야기가 있는데 20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8월 말까지 가면 20조 손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그렇게 손실을 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관광 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마는 그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국민 전반에게 미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어디 어디 어디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 관련된 산업들에 미치지만 일반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식당이 어려움을 겪으면 식당에 원자재 대 주는 데도 어려움을 겪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 명동이나 동대문은 어때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과 같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명동과 동대문이 행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85%가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또 물건을 대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또 경제를 다시 잡아서, 살려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PPT 한번 틀어 봐 주세요.

또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했어요. 1차 광고에서는 다 넣었는데 2차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뺐어요, 딱 국민일보만. 왜냐고요? 읽어 보세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하는 말이, 대통령 패러디를 기사로 썼더니 ‘그게 기사가 되느냐?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국장이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래? 알겠다’라고 하더니 다음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쏙 뺐어요. 알고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법무부장관 하던 황교안과 총리의 황교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왜 그렇게 다른 것 같으세요? 당신이 부족한 그 사이에 국민이 힘들어요.

‘빨리 총리실 보고해라. 이걸 뭐고 저건 뭐고 어제 한 얘기는 뭐야? 다 가지고 와. 오늘은 밤을 새자, 너희도 새고 나도 새고. 대통령께도 가자고 말씀드려 봐라, 대통령 무슨 생각인지. 김성우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청와대 홍보수석와 봐라, 이야기해라’라고 추상처럼 날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메르스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필요한 때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화면 틀어 주세요.

법무부차관이 발표를 합니다, 6월 5일. 6월 4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자 바로 발표를 하면서 1분 동안만 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유유히 떠납니다. 박원순을 겨냥한 발표라고 하는, 정치적 발표라고 하는 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박원순 시장은 다음날 고발당합니다. 9일 만에 배당했어요.

우리 총리, 사면 관련해서 고발당하셨지요? 6월 12일 날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배당을 안 했어요.

잠깐 들어가실래요?

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은 9일 만에 속사포처럼 배당하고 왜 높으신 황교안 총리는 배당을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정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특별한 의미가 차관에게만 없지요.

차관, 잘못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배당은 검찰에서 통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여기 보고도 안 받고 뭘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보고받고 나오셔야지요.

우리가 법사위 때 그렇게 많이 질문했으면, 오늘 서영교 의원 질의면 ‘질문할 거다’라고 하고 보고받고 나와야지요. ‘왜 빨리 배당 안 했어? 법은 공정해야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 안 되지’라고 하고 갖고 나왔어야지요.

사과하시고 책임지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소리를 듣고요.

황교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틀어 볼게요.

‘노무현 정부가 단행한 사면의 제반을 면밀히 봐야 한다.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동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잘못했지요? 치우쳤지요? 정치적이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여러분이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순간 국민이 죽어 가고 있다, 국민이 아파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다음 물을게요.

성완중 수사 제대로 끝났어요, 성완중 리스트?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다 해서 몇 명이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무엇이 몇 명이라고 하시는지,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의원 알고 계시네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8명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예?

○서영교 의원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자는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크게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구속자는 없습니다.

(「빈정대지 말고, 왜 그렇게 빈정대」 하는 의원 있음)

(「사실관계 확인하는구먼」 하는 의원 있음)

○서영교 의원 리스트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야당을 슬쩍 끼워 넣고 지금 야당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시키고 있어요. 야당 탄압의 전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들어가세요.

(「누구는 서면으로 하고 누구는 부르고 그게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무능한 정부, 나쁜 대통령, 국민은 서운합니다. 국민이 아픕니다. 국민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죽고, 하늘이 분노했습니다. 경제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바로 서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갑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메르스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메르스로 인해서 24시간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전국 지방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에 2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20위권 안을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100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만드는 길은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소상공인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생과 협력을 하고 정부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경제활성화법안, 관광활성화법안, 의료서비스법안 등 8건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 문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는지 여야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과연 20대 국회는 이 자리의 몇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가 선진화법, 청문회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저는 정치 분야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경제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마 거의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 같아서 주로 경제 분야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참고가 돼서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돼서 기업이 사업역량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하루빨리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수도권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 정비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원인 공장, 산업단지, 공업용지, 대학 등에 대한 규제를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최근 정부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도 같이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다 만족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한 시간 반, 두 시간 거리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이 넓은 땅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이 있지만…… 모든 공사도 지방으로 갔고 행정도 세종시로 갔고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따질 때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경기도 서울 인천, 얼마나 있습니까?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수도권을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려우면 지방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규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다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어렵고 일자리가 창출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30년이 넘게 수도권정비계획 묶었고요. 또 지금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 시·군은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재산권이, 모든 문제에 지금 너무나 규제가…… 해제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나 임야나 모든 토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다시 또 모든 게 좀 과열되면 또 정부가 규제로 묶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의원님 말씀에 경청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안정적이고 모든 것을 움츠려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에 있는 돈도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시키고요. 지하에 있는 돈을 벤처나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이런 것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대단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좋은 기술 만들어도 자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또 벤처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을 과연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나 지하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어서라도 경제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같이 지하경제를 살리는, 바꿔 말하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보면 외국에서 우리 국내인들이 돈을 벌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에서 국내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또 세무법에는 그것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애국자라 그러고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세금을 탈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안 갖다가, 외국 돈 갖다 한국에다가 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가 이런 것은 과감히 법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우리나라가 지금 감사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원 있지요, 총리실 감사 있지요, 각 도의 감사 있지요, 지방자치 감사 있지요, 검찰 있지요, 경찰 있지요.

이런 감사제도하에서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감사를,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받고 경찰에서 받고 감사원에서 받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이렇게 받을 때는,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제도를 이제는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총리께서는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겠지만 이런 것을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을 가지고 누가 진정을 내면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똑같은 사항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또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기도 올려 줘야 되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중국 공직자들이나 신흥국가 공직자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에는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총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말씀드리면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을 정부 정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서 과도한 감사가 소신 있는, 좋은 공무원들의 다른 의욕을 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 국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요즘 공직자들, 많이 개선됐고 깨끗해졌습니다. 공직자들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사,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이스포싱이나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가지고 우리 국민들 많은 피해 보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런데 이것 보면 말이에요, 각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조 잘 해서 가지고 강력히, 좀 더 지금보다 강화한 법을 적용해서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동의합니다.

검정에서도 가짜 핸드폰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대부분 경찰 정보과에서 웬만한 것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수사를 과감하게 못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1년에 몇천 명씩 피해를 보고 다 불안해하고요, 국민과 국민이 서로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법치국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우리가 30개월이 됐습니다, 창조경제를 외친 게. 그런데 아직도 각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리께서 빨리 조율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박근혜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동의합니다.

○**이우현 의원**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성장 기조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또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서 투자활성화를 촉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성화가 국민의 행복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사면을 보면 전두환 정부가 14회를 했고요, 노태우 정부가 6회, 김영삼 정부가 9회, 김대중 정부가 6회, 노무현 정부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인 박근혜정부는 2014년 1월에 생계형 민생사범에 한해서 단 한 차례 사면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이나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고 또 정치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께 건의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폭적인 사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지금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면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마는 또 국민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예체능 특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군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역제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체육이 됐든 예체능이 됐든 군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병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된 나라에서 이제는 자기의 특기를 살려 가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군인들이 주말에 못 나오는 사람들 같이 체육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도 올려 주고, 학교 다닐 때 자기 체력을 못 다

룬 군인들한테 체육특기자들이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병역을 마칠 수 있는, 그래서 병역을 기피 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관계 부처 협의를 잘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계속 연기합니다, 30세까지요. 그러다가 군대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제날짜에 가서 병역 마치면서, 자기가 병영생활 하면서 자기 특기 발휘하면서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동료들과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동료들도 주말이 지루하지 않은 그런 병영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다가 잠시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금융권에서 너무 규제가 똑같으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숙박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최고 불편해하는 것이 숙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자금 이런 것도 과연 우리가 정말 산업체에만 좋은 제도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하는 사람한테도 산업 하는 사람과 동일한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100만 명의 좋은 청년들이 일자리, 직장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디를 갑니까? 알바하러 아무 데나 가는 것입니다. 대포폰 통장 가지고 은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강력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경제활성화에 전념하는 총리가

돼 주시고 많은 의견을 듣는 그런 총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조계는 모든 것을 많이 아시지만 일반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많은 의견을 듣는 그런 총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메르스로 인해서 정부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미래세대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 행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어제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였습니다. 메르스를 이긴 기적의 탄생이고 모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듯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와 메르스는 다시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정치권의 리더십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의 사전 대처가 철저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점에 대해서 국정을 맡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의 담화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공직자로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혹시 이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구태여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서울시장과 국정이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총리께서 볼 때에 박원순 시장의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과적으로는 정보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런 판단을 정부도 하고,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 공개가 그러면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일이었는데 언제 공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환 의원 정부는 공개할 생각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너무 일찍 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개가 필요한 때에 공개를 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 시점이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예.

현안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에 부치지 않고 회기 만료 시까지 계류시켜서 자동 폐기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헌법의 위배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게 헌법의 위배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것이 꼭 바로 헌법 위배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지 않을 경우에, 헌법 제53조 제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헌법에?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재의에 부치지 않으면 헌법 위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배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위배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조금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만일에 이것이 헌법에 관한 논란이 있거나 이것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쟁이 발생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된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국회의장 중재안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중재안이 지금

정부에 와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것이 되게 될 경우에는 정쟁이 유발되고 국정을 혼란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까마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는 여론도 중요한데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법률가시기 때문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헌법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법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가능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뭐 그런 결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요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도록 또 아까 얘기한 이런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쟁을 줄이는 것이 메르스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께서 처리하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총리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십니까?

○**김영환 의원** 거부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태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뭐가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 하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환 의원** 메르스와 세월호는 인재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대처, 골든타임 로스 그리고 국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으로서는 저는 총리에 임명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여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환 의원** 대통령께 칭찬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그런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환 의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한양성에 도달한 것이 2주 만이었습니다. 선조가 피신을 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평양으로, 의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컨트롤타워가, 서애 류성룡이 ‘내가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마는.

명량해전이 일어났는데 그 위기 순간에 이순신이 ‘부통제사가 컨트롤타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 컨트롤타워가 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말한다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부터 여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온다고 왔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김영환 의원** 위기에는 지도자가 숨지 않는 법입니다. 지도자가 있음으로써 국민이 안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모습을 가질 때 국민들은 메르스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컨트롤타워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무원 모두가 이 일에 관해서는 정말 큰 엄중함을 느끼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하워드 솔츠라는 스타벅스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을 보고 ‘SNS는 물론이고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소셜커머스를 포함해서.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이렇게 잘하는 국민과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한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도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에 대해서 말한다면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 된 이후에 소통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지역감염이 없다. 공기감염이 없다’ 이런 것에 집착한 나머지 2m 이내에 한 시간 이상 함께한 사람들만 격리 조치한 최초의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메르스는 지금 발견이 된 지가 3년 됐고, 초기에 WHO에서 아마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해서 대처기준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대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정한 기준보다 좀 벗어난 범위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로서는 그런 검토보다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더 광범위하게, 광폭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좀 더 과학적이고 면밀한 그런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제 가설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방어선은 5월 20일 1번 환자가 최초로 확진이 되었을 때, 삼성의료원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에 때문에 확진이 되었을 때 그분이 거쳐 온 평택성모병원을 포함한 병원들을 코호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으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해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호트에 관해서는 또 의료인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2차 방어선은 5월 27일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1번 환자처럼 격리실에다 뒀으면 하나도 삼성에 확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격리하지 않고, 코호트를 삼성병원 응급실이라도 실시했다면 우리는 환자를 적어도 이삼십 명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방어는, 삼성서울병원 격리실을 격리하고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것이 2차 격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초기에 격리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된 뒤에는 아주 좀 광폭으로, 폭넓게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초기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의료원을 코호트해요? 삼성의료원

을 관리하고 끌어잡니까? 정부가 삼성에 끌려 다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삼성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삼성이 정부를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왔다는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보건 당국에서도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곧바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메르스 사태의 진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번 환자가 14번 환자를 감염을 시켜서 슈퍼감염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삼성의료원의 환자들이 전부 14번 환자에 의해서 감염된 것입니다.

그런데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는 27일 날 삼성병원에 입원했고 3일 후인 30일 날 삼성병원에서 5명이 증상이 발현합니다. 전부 14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1번 환자가 온 곳에는 전부 메르스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의료원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염경로와 역학조사가 새롭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병원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뭐냐, 1번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어디어디는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1번 환자가 입원한 평택성모, 365열린병원, 아산서울병원 모두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30분 들어갔던 곳도 다 감염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을 17일 날 들어갔다가 18일 날 10시경에 다시 응급실로 왔고 50시간을 삼성병원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의한 감염이 1명도 나타나지 않고 35번은, 35번 환자가 의사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사의 감염이 14번 환자에 의해서 됐는데 그것은 2~3일 사이의 잠복기 만에 35번이 감염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 걱정거리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 정부와 보건 당국이 낙관적 전망과 희망적 관측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64명으로 합리적 범위를 강력하게 설정했다’ ‘전염력이 대단히 낮다’ ‘1, 2, 3차로 갈수록 전염력이 떨어진다’ 등등 정부와 보건 당국의 낙관적 전망과 희망적 관측이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했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건 당국의 이야기는 ‘이제 지역 내 감염은 없다’ ‘지금까지는 병원감염이다’ 이런 취지 때문에 병원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감염, 공기감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걱정하시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지역감염이 작지만 일어나고 있고요. 가족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4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날 때까지 모든 부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꼼꼼하게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영환 의원** 총리님, 지금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이 정보화사회, 스마트폰 센트릭(smartphone centric)의 사회 그리고 정보유통의 사회, 플랫폼의 시대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사고방식과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다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정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과 대결이 아니라 상생하고,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가 되어야 되고,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제왕적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플랫폼 정치의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제 말씀에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결이 아니고 상생의 정치

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환 의원**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일본을 고립시키고 일본하고 역사논쟁 영토논쟁 위안부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인, 우리가 위에 서서 저것을 정상회담 내지는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관계 발전이 필요한 점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호혜적인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환 의원** 일본과 아베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요? 또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가 조금도 풀려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말씀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여론들을 듣고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의원** 성완중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대선자금 또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리스트가 수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사건은 비리에 관해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총리가 임용된 지 하루 만에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4·16 연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소환했고요, 그리고 야당 핵심 인사를 소환하고 있고요, 리스트에 나오지 않은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금 총리 인준과 이것이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판단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하

고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고 정부의 각 기관들이 필요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의원**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지성에서는 그리스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보다 못하고 기술에서는 에트루리아보다 못하고—이게 피렌체가 있는 지역입니다—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보다 열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면 성을 쌓기보다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들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과 로마를 위해서 땀을 흘린 사람을 로마시민으로 포용했습니다. 이런 포용과 개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읽으신 적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영환 의원**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영웅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몽군주시대가 아니고 플랫폼의 시대, 스마트시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광속처럼 빠르고 쌍방향 실시간으로 교류되면서 혁신의 강도가 벼락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시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국무위원 한 사람도 없이, 토론이 없이, 정보의 유통이 없이 이렇게 해서 사태를 키우고 사건을 이렇게 인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태의 본질을 보는 지도력 부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총리가 되기 전에 국무위원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어두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듯이 제발 메르스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정점에 총리가 계십니다.

국민과 맞서지 말고 상생·연대하고 국회와 대결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고 야당을 몰아붙이지 말고 국정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김영환 의원** 내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의 목표도 국민의 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되고, 일방통행과 대결의 정치가 아닌 타협과 합의의 정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적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생산성과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의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험만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은 과거의 성장과 투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아니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시대의 정치로 전락하여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합니다.

○**김영환 의원** 이번의 정보 공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만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뿐이지 플랫폼에서, SNS에서, 카톡에서 국민들은 어디의 어느 병원을 거쳐서 어디에서 메르스가 발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정신과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보 공개의 시점에 관해서 좀 견해가 달랐던 부분에 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김영환 의원** 개방과 상생의 출발점은 국민과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연대하시기 바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는 또 올 것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사고는 우리 앞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과 리더십 정부를 가질 때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위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당진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당진시 출신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셔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1번 감염자와 14번 슈퍼전파자가 격리 해제되는 등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이 병의 특징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이 되고 더 이상 환자가 생겨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총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직접 현장에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을 따져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덕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보건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러한 진정 국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의료진이 한 달 넘게 어떻게 보면 환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의 공무원들도 보건소 직원이나 정말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야가 세월호 때와는 달리 초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아주 정치권에서 좋은 본을 보여 주셨다,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완 의원** 특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세월호 때와는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공감합니다.

이번에 그런 조치들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많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메르스가 남긴 상처 중에서 이제 꼭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은 위축된 서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당정 회의에서 약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재정 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서둘러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되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처가 출범해서 큰 어려운 일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은 특별히 의료 전문영역, 특정 전문영역에 관한 재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처가 범정부적인 이런 지원 시스템을 좀 동원해서 의료진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저는 내무부의 방재계획과장을 맡았었고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국장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대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군경 등 범정부적인 대처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것의 컨트롤타워를 질병관리본부로 했던, 현재 재난관리 대책으로는 제대로 초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그런 우려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이런 시스템, 초기에는 그랬습시다마는 곧 이어서 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를 책임지고 또 이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처가 이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중심의 질병대책을 전반적으로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 활용해서 지원하는 이런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그 당시에 총리대행으로서 이것을 다 총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총리가 된 뒤에는 그 시스템을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1번 감염자가 아무 통제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든가 또는 14번 감염자와 같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이나 경찰의 도움 없이는 질병관리본부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정부적인 대처능력을 갖는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는 각 부처에서 다 나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휘 지시할 수 있는 모든 통신과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행 재난관리 대책은 그것이 초동대처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안전망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광역화되는 이런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현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국민안전처장관하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행동지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SNS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이래서 이것을 전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에 국가방역체계를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행동요령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매뉴얼들을 더 보강하고 보완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런 일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어느 분야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동완 의원** 초동대책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초동대책은 지금 대응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5조2항, 그다음에 시행령 별표 1의3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저도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 재난관리대책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동대처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야당에서도 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원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김동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는 저희 국민안전처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재난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발생 양상이나 유형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방법도 아주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안전처에는 감염병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을 갖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일차로 그 걸 갖다 한다 그러면 저는 더 큰 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장관님은 종합상황실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을 지휘 지시할 수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김동완 의원**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일선의 소방·경찰이나 또는 일선 공무원들의 도움을 안 받고 격리해제조치가 되고 또 자기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막 격리를 이탈해 돌아다니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경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지휘권은 장관님이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적인,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질병관리·방역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종합상황실

을 보건복지부에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신과 장비를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계부처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제가 인체에 비유해서 하겠습니다. 인체에 지금 피가 계속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습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휘하던 그 질병관리본부를 아무런 지식이 없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그것을 지휘한다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완 의원** 질병관리본부를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상황팀들이 우리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로 와서 근무를 함께 하면…… 매일 상황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상황보고서에 따라서 국민안전처 상황실이 가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과 우리 보건에 대한 지시권을 행사를 한다면 초동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일 날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하면서 중앙관리본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24시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지난해 세월호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찰교육원에 있다가 팽목항으로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까. 왜 광화문에 있는 종합상황실로 오지 않고 팽목항으로 갔느냐? 그것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상황실에 가 봐야 아무 현장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거길 간 겁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안전처의 종합상황실을, 헬기애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중

합상황실에 오도록 고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의 종합상황팀이 국가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 즉석에서 경찰, 소방, 모든 지방자치와 협조체제를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재청 시절에 CCTV는 9000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34개 부처 그리고 2만 190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 땅, 바닷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군용기와 군함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일어나면 상황실로 갑니다. 절대……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김동완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휘하는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건복지 상황을……

○**김동완 의원**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김동완 의원** 그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기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있고, 저희 본부……

○**김동완 의원**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에 와서 같이 지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상황실에 와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영상으로 다 할 수 있 다니까요.

○**김동완 의원** 그러면 그 즉석에서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그런 얘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본부가 다 오면 그러면 그쪽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와서?

○**김동완 의원** 이제 초동대응을 하고 난 뒤에, 재난은 그 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 갑니다.

장관님, 지금 초동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뭐 초동대응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행 재난관리체제를 조금 바꿔 줘야, 지금 국가안전처가 항상 뒷전에 몰려 있고 초동대처가 잘못됐다고 매번 재난만 나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김동완 의원** 국민안전처가 지금 8개월이 지났어도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꼭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빠트리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더욱 두렵습니다.

○**김동완 의원** 지금 법에는 빠트린 게 없습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동대처의 미흡을 낳고 있으니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허전하시겠습니다. 인사도 떼어 주고 소방과 방재도 떼어 줘 가지고 장관님이 좀 허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행안부장관님이 제일 편한 장관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이……

○**김동완 의원** 아주 어려운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일들이 이제 국가안전처로 넘어갔으니까 행안부장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낫지 않은가, 저도 근무를 한 30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행안부장관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런 업무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장관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행정 실수가 아니라 상당히 정무적인 일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 조정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김동완 의원** 굉장히 정무적인 일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김동완 의원** 먼저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광판을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 13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평택항의 매립지에 대해 29%는 당진이, 나머지 71%는 평택이 나누어 관할하도록 의결하고 장관께서는 원안대로 결정하셨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진·평택이 매립지를 두고 서로 간에 조정이 잘 되고 양쪽이 다 합의가 잘 성사되면 참 바람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으로 갔는데, 김 의원님 아시다시피 분쟁으로 가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순조롭게 서로 지자체 간에 논의를 잘 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양쪽이 다 서로 간에 양보를 못 하시고 그것이 분쟁으로 간 것을 저도 주무 장관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 분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원래는 선진국도 그렇고 독립적인 경계구역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그게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그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정하고…… 위원들께서 자주 참여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위원들은 거의 대리참석하고 이런 구조에서 그걸 검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역 간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킨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는지를

장관으로서는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참 주시를 하고 있었고 또 김 의원님 아시다시피 당진 의원님들 또 당진시 또 지방자치단체, 충남지사 또 김 의원님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다 하시고 했는데 제가……

○**김동완 의원** 장관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건 다 만났습니다. 저는……

○**김동완 의원** 저를 안 만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설명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김동완 의원** 제가 문서로까지 만나자고 방문 요청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아, 그러셨습니까? 저는 다 만납니다. 안 만나 줄 일이 없고……

○**김동완 의원** 저를 왜 안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김동완 의원** 그러면 다른 일정이 있으셨다면 장관님께서 전화로라도 ‘내가 이리이러한 날짜는 안 되니 이 날짜에 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거 혹시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하셨습니까?

○**김동완 의원** 전에 한 번 방문했고 뒤에 두 번 방문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에는 다른 분들이 다 다녀가셨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들었고 또 우리 의원님을 제가 안 만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당연히 그것은 제가 뵈고 만나고 해야지요.

○**김동완 의원** 그러면 밑에서 보고 안 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인데, 그거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법적 차원에서 그거 설계하는 문제는 별도로 치고 현행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결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는, 의결이 있는 다음에는 제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런데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장관님 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제가 별문제가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 평택시장이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현재의 평택부시장이 그 업무를 맡다가 평택부시장으로 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 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완 의원** 지방자치제도과장이 그 업무를 맡았다 가셨지요, 지금 평택부시장.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의 출석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의는 몇 번 열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회의를 여는 횟수와 회의를 의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는 전혀 하자를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동완 의원** 회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들 출석률이 거의 낮았고, 그리고 정부 차관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은 100% 과장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구의, 이렇게 조직 구성에 있어서 문제나 운영에 있어서 편파성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맡겨 놓은 장관님의 그 업무 처리 방식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편파성이 있다면 그 위원회가 작동을 안 하겠지요. 물론 그 회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 회의의 횟수에 의해서 심의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듯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공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동완 의원** 그런 중차대한 얘기를…… 자문기구로서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 도계 분쟁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맡기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허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 또 합리성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행법, 현재 있는 실행법에 따라서 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무 장관인 저로서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또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김동완 의원** 그러면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진·평택항 위에 있는 것이 서해대교가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서해대교의 도로표지판이 들어 있는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이 보이는 화면을 보여 주세요.

지금 서해대교의 주탑이 두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로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지요, 충청남도라고?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 설치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이게 왜 설치했느냐 하면 2004년도에 해상경계선을 도계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10년 전에 설치한 도로표지판입니다.

장관님, 헌법학자이시지요?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떤 법의 안정성도 고려하고 비교형량의 원칙도 고려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은 29%, 일본은 71%로 나누어 가지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

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글썽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현재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이게 지금 대법원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무 장관이 분쟁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 제가 그래서 장관님이 무책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정무 지휘 기능을 잘 수행을 하셨더라면 대법원까지 안 갈 일을 대법원으로 가는 바람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도계 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쟁으로 가기 전에 서로 조정을 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서로 간에 이게 의견이 전혀 양보가 안 되는 마당에서 이게 분쟁으로 갔고, 또 그 분쟁으로 가면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관이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법이 아닌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 2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륙교가 되어 있는 전광판을……

지금 현재 당진으로 연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년 전에 항만기본계획을 만들 때에 저 항만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을 서평택IC만으로는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진으로 연륙교를 만들어서 송악IC로 분산 처리해야 된다는 뜻 때문에 1차 항만기본계획부터 들어가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에 대해서 도계 분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평택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다리를 놓지 않게 되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항만은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파장이, 제2차 도계 분쟁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글썽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별건 문제라서 그 문제는 또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갈등을 조정해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정말 이것은 책임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김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장관이 갈등을 조장할 리는 전혀 없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해 나가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완 의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장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양쪽의 의견이 충돌되는……

○**김동완 의원** 실무적으로는 부칙에 되어 있는 소급입법을 근거로 했는데 실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문에는 그 조항을 들지를 않고 4조3항을 드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헌법학자이신 장관님께서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또 저대로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제가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완 의원** 저는 여기가 강의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 좀 깊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 도계 분쟁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우트라인은 들었습니다.

○**김동완 의원** 전광판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으로 이어지는 저 연결도로가 평택의 반대 때문에 건설되지 못한다면 항만 운영이 반쪽짜리가 되는데, 괜찮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자세

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저는 이것은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대중국 수출을 키워 나가는 데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이 잘 건설되고 잘 운영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의원** 해양수산부에서 그 연륙교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비용 편익 비율이 1.09로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 교량이 경제성이 있다면 이 사업은 해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한번 관련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완 의원** 그래서 지역이기주의가 우리 국책사업을 막는 일이 없도록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같은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 총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총리님께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꼭 살펴서 정부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메르스 세균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오로지 사명감만 갖고 병상을 지키고 있는 존경스러운 의사·간호사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국가적 위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메르스 앞에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지혜를 모으며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동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원석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면사건 수임 관련된 의혹으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을 좀 깊이 생각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 총리만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총리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단체는 법률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변호사단체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사면사건 수임 관련된 의혹으로 총리 자격은 물론이고 법무부장관을 했던 것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사면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일 경우에 역대 의 자문료를 받는다는 계법조계에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회사에 수십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된 지 10개월 만에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사면자문을 받아서 특별사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2000년대 초에 법무부장관을 지낸 B 씨는 사면사건들을 수임해서 건당 1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두 황교안 총리 사면사건 수임 사실이 공개된 이후 나온 보도들입니다.

청문회 이후에 전관 변호사들의 자문 내역과 자문료를 공개하라 이런 국민들 여론이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마당에 총리께서는 2012년 수임했던 사면사건의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공개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수임료는 의뢰인의 비밀누설과는 상관이 없고, 저는 차제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자리는 정무 분야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청문회에서 여러 번 질의

하셨고……

○박원석 의원 그건 질의하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원석 의원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이 해명이 안 된 것은 중요한 국정의 문제입니다. 답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원석 의원 청문회에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안 하셨고요. 이렇게 또다시 답변을 회피하신다면 총리께서는 재임 기간 내내 사면수임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 의혹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그런 총리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사면 고소에 관해서는 무고의 검토까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의원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의원을 협박하십니까,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저를 근거 없이 고발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 딱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뜻을 잘 받들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일에 저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와 함께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리 생각,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박원석 의원 그런데 인사청문회 전부터 총리의 종교 편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편향을 나타낸 바가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거는 관찰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종교적 성향이나 개인의 신앙이 총리로서의 정책 수행과 별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요. 그런데 총리의 종교관에 대한 우려는 비단 타 종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종교 편향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께는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직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편향된 결정을 하거나 편향된 집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2년 3개월 근무하면서 종교 편향에 따른 법무 정책에 시비가 됐던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저서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속의 법보다 교회의 법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종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실정법이다’ 제가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박원석 의원 좋습니다.

역대 총리들은 취임한 뒤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른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이완구 총리 또 정홍원 총리, 취임 다음 주에 조계종 총무원을 인사차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총리들은 대부분 취임하시고 나면 7대 종단 대표들을 예방해서 국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언제 타 종교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시간 범위 안에서, 지금은 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르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원석 의원 메르스 대처 때문에 총리가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늦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6월 21일 한 언론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가 ‘메르스 확산 책임이 박 대통령에

게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 시점이 적절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5%는 '늦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당국의 메르스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고 그 주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이미 추락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들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의 많은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또 지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개선책을 마련했고 또 힘을 모아서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5월 20일 날 처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명단을 거부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정부 스스로 초래를 했습니다.

병원 명단 요구가 거세진 29일부터 명단 공개 전날인 6월 6일까지만 확진자가 56명이 늘었습니다. 조금만 명단 공개 시점이 빨랐다면,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감염자의 상당수는 발병을 피할 수 있었거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3차 감염, 4차 감염과 같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방에서 대응 그리고 수습까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인 난맥과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야기한 명백한 관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기 단계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그 지적을 수용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대처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초기에 미진했던 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단계별로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의 활동 방향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이 이번 사태로 보면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정부 대응 체계가 굉장히 허술했고 안이한 대응과 계속된 오판으로 허둥지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 감염병 예방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원석 의원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의 이런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으로 인해서 정부 신뢰가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내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메르스 대처에 정부와 저희 공직자들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제 질문은 국민들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총리께서 대통령 사과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듭 말

썸드리다시피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삼성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6월 11일 날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에 나와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평가의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박원석 의원 이 말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삼성은 삼성대로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오늘 현재 전체 확진자 179명 중 절반가량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삼성서울병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책임, 누구에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이런 질병재난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저희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병원들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책임하에 의료기관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책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관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병원 명단 공개를 그토록 미적거리는 이유가 삼성서울병원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지적이 파다합니다.

삼성병원에서 무더기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온 6월 7일 삼성병원은 메르스에 노출된 893명의 의료진과 직원, 환자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80명 중 무려 45명이 격리조치 했다는 893명 이외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 삼성병원의 격리조치가 그만큼 엉터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격리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삼성병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리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왜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삼성병원이 격리를 완료했다고 하는 6월 7일까지 격리자 명단조차 삼성병원으로부터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격리조치를 책임지고 해야 될 지자체는 배제된 채 사실상 격리 등의 방역조치를 삼성병원에 일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환자를 받아야 되고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쇄·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137번 환자나 138번 환자처럼 감염되고도 며칠 동안이나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역학조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확보된 CCTV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진술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병원 CCTV에, 이를테면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어서 상당 부분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로서는 자기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자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자기가 같이 간 사람, 같이 간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CCTV에도 안 나오고 나오지 않으니까 역학조사에서 점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번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책으로 지금 병원 방문자들에 대해서 전수기록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긴급하게 좀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초동에 역학조사의 범위라든지 대상에 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된 직후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아주 광폭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 되는 기간 동안에 병원을 방문했던 5만여 명의 방문자들 신원을 다 확인해서 사실상의 역학조사를 좀 했고, 병원 관계자가 구천몇백 명입니다. 900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뒤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물론 그래도 또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사후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의원** 메르스 확산에 정부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대면서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잘못은 무엇인지, 행여 정부관계자와 의료기관과의 유착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자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태를 조속하게 진정시킨 직후에 곧바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미비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될, 이것 외에 나머지 감염병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원석 의원** 맞습니다. 지금은 사태의 빠른 종식이 우선이고요. 저는 사태 종식이 된 이후에 메르스 사태 확산의 경위와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예산

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현시점에 추경예산 편성이 몇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법 없이 반짝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올해만 재정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국채발행과 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하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상화되면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가 갖고 있는 경기대응 수단은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추경 시점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인하를 하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경기가 안 살거나 더 큰 충격이 와 가지고 경제가 흔들린다면 그때 가서는 정부가 꺼내 들 정책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예산의 내용과 효과 문제도 있는데요, 그간에 정부가 재해대책을 내세워서 추경예산 편성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재해대책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고 투자가 되다 보니까 효과는 제한적이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장의 메르스 사태 수습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고 보다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국채발행 없는 세출경쟁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걱정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과 같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같이 붙어서 무척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규모나 방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경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이 들어오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최초에 수사의뢰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며칠 후에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해당 단체에 전화를 해서 법 위반 혐의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특정하고 고발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사의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검찰이 다 고소 고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뢰의 내용상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만 수사의뢰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서 고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방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어 본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박원석 의원** 검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사의뢰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발로 전환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수사의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 고소 고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박원순 시장 발언은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 박 시장 회견을 계기로 정부는 비밀주의를 포기하고 정보 공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해당 환자의 실명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 부분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설사 박 시장 발언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지율이 오른 박원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 정부의 메르스 초동대책 실패를 몰타기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 검찰이 어떤 특정인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수사를 활용하는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 정부도 여당도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시간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멍 뚫리는 메르스 대책을 점검하는 데 더 힘을 쏟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고요. 하나만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그런데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격리조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무려 1189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박원석 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WHO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격리 대상자로 보고 있는, 분류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지자체 중에서는 그보다 더 좀 광역으로 격리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자체 격리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격리로 고생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 국민들에게 누구는 중앙정부 격리 대상자고 누구는 지방자치단체 격리 대상자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기준에 따른 격리 대상자와 지방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조만간 정리가 될 것입니다.

○**박원석 의원** 확인하셔서 조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의 난맥이 계속되고 국정운영의 불공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은 홍보용 사진 속에만 등장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지

휘하는 대통령, 국민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원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석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기 시흥갑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총리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메르스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79명의 확진자 중 27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15.1%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자는 총 3103명으로 이 중 자가격리자가 2207명, 기관 격리자가 896명이고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이 43명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격리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누적 격리자는 총 1만 43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공포까지 고려할 때 메르스는 온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메르스 사태의 질문에 앞서 우선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친 채 메르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와 그 경의를 표합니다.

총리,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의 안전 컨트롤타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잘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걱정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많은 지적들을 수렴해서 체계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제가 외국의 예를 좀 봤는데요. 미국의 CDC라고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질병통제예방센터. 오늘 언론 보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상황이 발생하면 전권을 가지고 군대 파견 요구와 지역 통제 권한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현장에서 전권을 가지고 군경을 모두 통제했던 사람은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 CDC……

○함진규 의원 뉴욕 소방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메르스 사태가 되었던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되었던 무슨 일만 터지면 모두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각자 맡은 직역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원님 말씀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의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재난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관의 책임자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대통령은 현장 책임자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하여 혼신의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우리 사회의 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의원 아울러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 부처를 통합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국민안전처에 전염병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안전처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안전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재난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자연재난도 있고 또 사회 재난도 있는데, 그 유형들에 따라서 모든 인력을 다 미리 구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우리 국가재정 여건도 그렇습시다마는—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스템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점을 좀 감안해서 필요한 보완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민안전처의 역할, 범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질병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저는 국민안전처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소방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 등 아마 여러 기관을 통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막상 지금과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관련 인력 확보를 미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자, 메르스는 3년도 안 된 신종 바이러스인데 잘 모르면 최악을 가정해서 보수적으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무시되었고,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고, 병원 폐쇄 같은 초기의 강력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라는 것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복지보건부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름은 보건복지부입니다마는……

○함진규 의원 금년도 제가 예산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정부에서 보건 분야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총 53조 472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81%가 복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또 2006년도에 그나마 32%였던 보건 예산이 금년도에는 12%가 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보건 예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확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16명 중에서 의사 출신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과거. 그것도 단 50일간 장관직을 수행했던 단명 장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병관리본부가 수도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송에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안전처는 서울에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오송에 있고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각 공무소들이 배치가 된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그것이 과연 통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총리께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만이 국가 안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도 국가 안보라는 의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비가 안 와서 정부를 원망하고 또 청와대를 원망하는 게 많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진규 의원 현재 인천, 강원도, 5개 시도, 39개 시군에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358ha의 논 물마름과 밭작물의 시들음 현상이 발생해서 피해가 막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기재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가뭄이 재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안전처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테면 농사 용지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또 나머지는 산업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재난으로 이르면 그것은 안전처에서 통할해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본 의원의 판단은 총리실에서 이 부분도 전면에 나서셔서 각 부처를 통합 지휘하고 유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를 필두로 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담당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자원 관리에 관한 측면들을 여러 부처에서 가지고 있고 또 통계시스템들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실에서 통할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금주 말에 비가 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기상이라는 게 아마 또 화살이 정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뭄 대응 체계를 통합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 기본법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이게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법안인데 말이지요 이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2010년 7월에도 이런 물 부족 상황을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를 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대책들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총리가 법무부장관으로 계실 때는 법무부 관련 예산, 법안만 다루셨지만 이제 총리가 되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이, 정부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이것들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진규 의원 선진국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

출했는가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구직자에게 일자리는 인생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 마련된 관련법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등 줄잡아 9개 법안만, 가장 시급한 9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최장 3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경우 투자 확대와 함께 66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것 2020년까지 통과될 경우에 청년 일자리가 35만 개 정도, 추정치 이기는 하지만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도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째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야당도 책임이 큼니다, 여당 못지않게. 의료민영화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2017년까지 통과될 경우에 최소 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법……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법안과 관련돼서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실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법률이 조속하게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 설득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함진규 의원 자주 식사도 하시고 만나서 설득 좀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에도 간곡하게 정부 장관, 총리를 비롯해서 어느 분 하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개선 아시지요? 제가 공청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이것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이게 국내에서 물론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입찰담합을 하고 여러 가지 중복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경쟁업체에서 한국 기업의 국내 행정제재처분 및 형사처벌을 집중적으로,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해외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발주기관의 불신을 초래하고 우리 한국 기업의 대외신인도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 총체적으로 정리하실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말씀하신 자격제한 문제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현행 제도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안의 경중이나 위반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일률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사법시험,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우리 총리께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셔서 지금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신데 저는 무슨 이런 제도가 있나 싶어요, 성적을 하나도 공개 안 하고. 로스쿨 1년 치 등록금이 1500만 원 이상이 갑니다, 최하.

그래서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해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새누리당의 노철래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여러 발의를 했는데 말이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권에서는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추진했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 덮어 두고 계속 가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이 문제는……

○**함진규 의원** 저는 로스쿨을 폐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왕에 시행된 제도면 투 트랙으로 같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과연 외국하고 무역거래가 다자화 되고 있는데 외국 전담을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법조 내부에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2017년 끝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충분히 저는 인지하고 계시리라 보고요.

어떻게 개인의…… 변호사가 뭐 다른 것 있습니까? 본인들 개인 자격 취득하는 건데 왜 타 대학의 학생들 등록금을 여기 갖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타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함진규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울에 중요한 큰 대학들은 인원을 120명, 150명씩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의 30명씩 할당 받은 데는 말입니다, 이 인원·시설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 같은 대학의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여기다 전용한다 이 말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

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진규 의원** 저희 지역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함진규 의원** 이것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재정사업으로 갈지 민자사업으로 갈지 여야 의원, 특히 저희 여당은 둘뿐이 없습니다만 야당 의원들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조속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KDI에서 민자 적격성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조속히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시흥·광명 보급자리에 관련돼서 네 번째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시흥·광명 지구 관련돼서 5년 전에 묶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성립한 이래 최초로 무려 525만 평이라는 게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다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막아 놔었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천왕-광명 간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일명 ‘금오로’라고 하는데 5년 전에 칠팔백억이면 끝날 수 있는 도로가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바람에 148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지방정부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경위나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다 못 드렸는데요, 시흥·광명 지구에 대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도 R&D 센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다 연계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시흥·광명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함진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이신 진선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331’. 2014년 4월 16일 304명, 2015년 6월 24일 현재 27명.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지켜 내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입니다.

메르스 재앙을 마주한 국민들은 1년 전 세월호의 비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초동대처 실패, 컨트롤타워 부재,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희생된 아이들, 메르스 감염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서 역시 희생된 분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때 제대로 했다면 지금도 그들은 우리 곁에 있을 이웃과 가족이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조차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만을 바라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거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정부의 무능함을 국민들의 아까운 목숨으로 메우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 반복되는 무능은 죄악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여전히 비극은 반복될 뿐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됐다’라는 말은 2004년 7월 김선일 씨 피랍 사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국가와 또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읽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의 생명을 한 명 한 명 끝까지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되

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는 최초 환자 발생부터 완치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고 다른 감염자나 사망자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메르스 증상을 호소하던 최초 환자를 이틀 동안 방치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격리 진료의 시기를 놓치고 이미 슈퍼감염자가 돼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준으로 격리자는 3000명이 넘고 확진 감염자는 179명이고 사망자는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반된 초기대응이 결국 27명의 희생을 낳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초동대처 실패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그런데도 총리는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제때 할 일을 다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사태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정부는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초동대처는 질병관리본부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복지부 차원의 일로 그렇게 확대가 됐고 또 그것이 더 넓어지면서 복지부와 또 안전처, 총리까지 나서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그러니까 할 일 못 하신 거잖아요, 초기에.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에서 대통령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 얘기 이미 많이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가 왜 만들어진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제대로 된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안전처도, 뭐 다른 부처도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처도 역시 초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 직후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다 수렴해서 국가의 역량들을 결집시키는 데 안전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

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엄청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 야기된 결과에 대한 대처 당연히 하셔야지요. 하지만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호의 뼈아픈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나왔는데 여전히 1년 뒤에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태에 관해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격리자가 3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과제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곧바로 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이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 주셔야 저희가 지금까지도 불안하지만 이후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들어가시고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메르스 사태 사회재난이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 안전처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신 겁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의 초동대처 미흡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장관님의 답변과는 달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선미 의원** 지금 메르스 대응을 보면, 그때 세월호 사건 때도 누가 컨트롤타워냐라고 책임 전가에 급급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월호 사건과? 뭘 그렇게 잘하셨나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선미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했냐고 했더니 제대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 예, 그게 잘했다는 거지요. 제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지요, 다른 게 잘하는 겁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희들이 현재 처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다 조치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제대로 했다고 얘기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 세상에 다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그렇습니까?

자, PPT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메르스 사태도 초기 며칠이 모든 희생자를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그렇습니다. 골든 타이밍, 그때 안전처가 뭘 하셨습니까?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난 6월 1일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에서야 비로소, 다음 날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시작했지요. 그것이 메르스 발생 13일 만입니다. 잘하셨습니까? 제대로 하셨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말씀드릴까요?

○**진선미 의원** 답변하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까도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또 동법 15조 2항에 새 재난에 대한, 특히 그중에서 감염병은 일차적으로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고 그것이 초과됐거나 또는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때는 국민안전처가 중대본이 가동되면서 제가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저는 장관님의 답변에 현 정부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오십시오.

여전히 모든 부처는 다 잘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 가능성 없다고 잘라 말했다가 21일 날 환자가 더 발생되자 말을 바꿔서 대유행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을 바꿨고요, 또 5월 20일에 정부는 1차 감염자가 다녀간 평택성모병원에 가서 3차 감염의 우려는 없으니 최소한의 인원만 격리 하라고 그리고 정상 운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성모병원 병원장의 증언에 따라도 본인이 광역으로 격리조치 해야 되지 않냐고, 그것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못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자진 폐쇄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환자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조차 밝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도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르스 환자 치료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에 우선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저는 그 진실성과 투명성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6월 16일 날 초등학교를 찾아서

‘메르스가 매년 유행하는 독감에 불과해서 손 씻기만 잘하면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메르스로 사망한 국민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심지어 사망까지 하고 여전히 격리된 채로 수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해 내고 있는 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전 국가적 재앙을 겪어야만 하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방 준칙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는 ‘때때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일 뿐이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집었고요, 메르스는 ‘매년 유행하는 독감일 뿐’이라고 또 국가의 재난을 마치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사에서부터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어서 40년째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1984년 9살의 나이로 형제복지원에 3년간 감금됐다가 생존한 한중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중선 씨는 아버지·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잡혀가서 술한 폭력과 강제노역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87년에 형제복지원에서 나왔지만 같이 잡혀간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홀로 고되게 살아가던 중선 씨는 26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와 누나가 그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선 씨의 소망은 오직 형제복지원에 가기 전처럼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처럼 70년대, 80년대 무고한 아동과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동과 폭력, 성폭력을 일삼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자만 최소 513명에 달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편견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국가보조금과 강제노동의 수익으로 호수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수백억대 자산가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이 형제복지원 사건 잘 알고 계시지

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잘은 모르지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제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진선미 의원** 지금 보신 그 상황들이 형제복지원의 실상인데 이것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와 관련되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또 국민적 합의도 도출하고 하는 등 아마 차근차근히 세심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의원** 지금 공청회가 준비 중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저기 방청석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저기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총리님 한번 봐 주십시오.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해 내야 역사의 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총리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지금 현 정권에서 이렇게 과거사 뿐만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조차도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일도 자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역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환 전

서울청장의 수사에 대해서 불구속수사 지시하시고 법리 적용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 방해하고 계셨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 보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부장검사마저 축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 줬던 3대 악습인 졸속 수사, 몰타기 수사, 면죄부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 국민들이 과연 앞으로 발표하실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실까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뿐입니다.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언급은 몇몇 기사에서만 간혹간혹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표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는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총리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는 진행상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마는 검찰에서 제반 증거들과 법리를 검토해서 충분한 수사 후에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현장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정부는 3년간 고집과 불통으로 진실을 덮고 진실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메르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정치를 표방하셨던 여성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을 떠나 진정한 사과와 가슴 깊이 우리나라는 위로를 받고 싶은 고통스러운 이때 부족한 저라도 메르스 사태로 수많은 고통과 슬픔, 불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위로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공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의 태도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좀 긴장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믿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메르스 사태의 초기대응에 정부가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 보니까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처장관이라면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좀 더 겸손하게 국민에 대해서 송구한 자세를 가지는 게 저는 옳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최소한 의장이 느꼈을 때 좀 고답적이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게끔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의사 출신입니다마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급성 유행성 질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장관직을 맡고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장관을 맡은 후에 급성 유행성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회의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록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주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최고예요」 하는 의원 있음)

○河泰慶 議員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의자 새누리당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의장님 최고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두발언 관련해서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정부도 초동대처에 실패했지만 국회도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시게 된 스물일곱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메르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일을 다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로 대정부질문 4일째입니다.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국회도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7일은 다섯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날입니다. 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접촉한 사람들에게 메르스가 퍼졌다는 것이 확인된 날입니다. 첫 번째 빨간불이 들어온 날이지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실을 그날 국회에 보고하였지만 우리 국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문형표 장관의 국민연금 발언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더욱이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국내 최대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던 이력이 있던 분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온 국회에 울려 퍼졌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9일, 그날 여야는 문형표 장관이 연금 발언에 대해 어떤 수위로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가에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은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메르스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힘겨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느끼시는 모든 심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우리 정부가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정성스럽게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돕고 이끌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메르스 질문 조금 이따 하고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고리 1호기 폐로 결정 난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제 지역구에 있는 고리 1호기가 국내 최초로 영구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안전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내린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원전해체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서 해체 문제에 무슨 원칙이 제일 중요한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총리님께 원전해체에 있어서도 안전의 원칙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는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 사건들을, 사고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원전해체 하는 과정에서 원전 안에 있는 방사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뿐만 아니라 해체 과정에서도 방사능 노출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안전의 원칙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 각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리고 또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 그리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정부가 방침을 확립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원전은 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河泰慶 議員 그러면 원전을 해체하면 돔도 해체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러면 이 돔은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돔이 파쇄되어 가지고 해체물 처리를 할 때 이 처리는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폐기물 방폐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처럼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자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중·저준위폐기물 방폐장에 처분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등은 따로 전용 방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영국은 일반 매립장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없고 이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해체 과정에 돌입했을 때 큰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2050년에 적게는 200조, 많게는 1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고리 1호기가 처음 해체되면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가 고급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고리 지역에 원전이 총 몇 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4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河泰慶 議員 지금 6기가 가동되고 있고 4기는 건설 중에 있지요. 총 10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10기가 없습니다, 한 지역에. 6기가 최대인데 정말 세계 최대의 밀집 지역인데 이렇게 원전이 많은 지역에, 특히 또 고리 1호기가 해체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데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입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충분한 검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체 기술이라든지 또 주변의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현재 원전의 건설·폐로 등은 산자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방사능폐기물 관련 사항들은 원자력진흥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전해체에 대한 주관 단위가 어디인지 총리님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디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마 같이 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산자부에서 그것을 주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프랑스에는 원전 해체 인력이 1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원자력청 소속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은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습니다. 현재 2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라도 15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체되는 원전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요. 특히 해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한 해체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메르스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5월 21일 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보시면 ‘메르스가 비말, 공기 전파 또는 직접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이것은 6월 2일 날 다운받았는데

요,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비말 또는 직접접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감염’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아무런 소리 소문도 없이 사후에 스리슬쩍 이렇게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보는 내용인데요, 통상은 잘 있지 않은 일입니다. 잘 있지 않은 일이고, 아마 처음에 보도자료 작성할 적에 실수한 것을 발견하고서 즉시 정정한다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경위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河泰慶 議員** 처음에는 공기 전파가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실수했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메르스를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질병관리본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보도자료입니다. 이것 보면 ‘중동 지역 여행(체류)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같은 보도자료가 6월 초에 다시 보니까 낙타하고 박쥐밖에 없습니다. 염소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다음 보도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화면.

‘무한도전’이라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TV 프로?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개그맨 유재석 씨가 나오는데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국내 염소농가한테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전 제작진이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있고 나니까 원래 보도자료에는 염소가 있었는데 염소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처음 보도자료를 잘못 냈다면 추가 보도자료를 내서 정정하고 정정하는 사유를 밝히는 게 당연히 옳은 일이겠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것이 바른 절차입

니다.

○**河泰慶 議員** 그런데 날짜와 배포시간까지 기록된 공식문서를 사후에 고쳐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정부가 뭔가를 은폐한다는 불신만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짐작컨대 충분한 검토 없이 그것을 제기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니까 검토를 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자료들입니다.

○**河泰慶 議員** 한번 메르스 잡고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도자료에 공기 전파가 들어갔다 스리슬쩍 빠진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은 공기 중 전염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보건복지부로부터 발표된 것과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WHO 자료인데요, WHO 자료에서는 ‘병원 내에서는 공기감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저 자료는 이코노미스트 지난주 자료인데요, 제목이 ‘대한민국과 메르스’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숨쉬지 마라’ 되어 있고, 본문 내용 중에 보면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감염이다, 아니다 그 데피니션(definition) —정의를 어떻게 됩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재채기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해서 침으로 접촉이 되고, 그래서 거리도 한 2m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메르스에 대해 연구된 결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메르스가 과연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되는지 이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議員**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현재도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감소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에 배포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행 자제령을 내린 국가가 러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홍콩이고 일본, 중국도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감염이다, 아니다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현실은 제가 자가격리자 몇 분한테도 전화를 해 보니까 같은 병동에만 있어도 다 격리가 됐습니다. 그 말은 2m라는 원칙을 이미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코노미스트나 WHO나 ‘병원 내’라는 조건하에서 공기감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공기감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만약 그렇다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河泰慶 議員**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河泰慶 議員** 그래서 정부가 특정한 조건, ‘병원 내에서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감염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해라. 하지만 병원 밖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동의합니다.

○**河泰慶 議員** 총리님 다시 한 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지만 현재는 어떤 상태냐, 진정세냐 아니면 아직도 불안정하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야 의원들이 많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왜? 그만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대통령님께서 이런 상황들, 오늘 이 국회 상황도 다 보실 것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대처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河泰慶 議員** 충분히 민심을 읽고 판단을 하실 거다 그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렵게

총리직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 필요한 이야기는 과감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초기대응 실패한 것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메르스 사태 언제까지 종식하겠다’ 목표 시점을 밝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대통령님 만나시면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27일부터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께서 ‘자재해 달라, 당분간 연기해 달라’ 권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총리 황교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河泰慶 議員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총 단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서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대정부질문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알리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장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답변은 개인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질문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 의원(268인)

강기운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재 중	유 윤 회
윤 상 현	윤 영 석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회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88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權 垠 希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정 록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한 표	김 현	김 희 국	남 인 순
류 성 결	류 지 영	민 현 주	박 남 춘
박 범 계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인 숙
박 혜 자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서 기 호	서 영 교	신 성 범	심 재 권
안 철 수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상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인 태
윤 영 석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재 영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성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조 명 철	조 해 진	추 미 애	한 기 호
함 진 규	홍 의 락	홍 종 학	황 영 철

○속개 시 재석 의원(68인)

강 기 정	경 대 수	權 垠 希	김 경 협
김 광 립	김 도 읍	김 동 완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한 표
나 성 린	류 성 결	문 정 립	민 병 주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윤 옥	박 홍 근	백 재 현	부 좌 현
손 인 춘	신 경 립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신 환	우 상 호	유 대 운
유 승 민	유 인 태	이 강 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석 현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현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전 순 옥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미 경
정 성 호	정 희 수	조 명 철	조 해 진
주 호 영	홍 영 표	홍 철 호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65인)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영 주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한 표	김 현
김 희 국	노 영 민	노 용 래	노 철 래
민 현 주	민 홍 철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인 숙
박 홍 근	부 좌 현	서 영 교	신 상 진
신 정 훈	심 재 권	안 상 수	양 승 조
양 창 영	오 영 식	오 제 세	유 승 민
유 인 태	윤 후 덕	이 강 후	이 미 경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종 배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한 성	이 현 승
장 병 완	장 하 나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진 후
정 호 준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정 배	하 태 경	한 기 호	홍 철 호
황 인 자			

○청가 의원(11인)

김 희 정	송 광 호	원 혜 영	유 일 호
윤 관 석	윤 재 옥	이 인 제	이 종 결

조원진 주영순 최경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교육문화체육관광	이에리사	박인숙	새누리당	2015. 6. 23
안전행정	박인숙	이에리사		

○의안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태호·이한성·서용교·김광림·이재영·장윤석·안홍준·정병국·홍지만·이채익·김동완·박인숙·이현재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맹우·강길부·이한성·장윤석·이채익·이노근·이만우·정갑윤·정희수·정문헌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한선교·서상기·정병국·김동완·배덕광·이균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윤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전병헌·안규백·이개호·김영록·홍의락·정청래·김우남·박민수·이찬열·최원식·박주선·정호준·황주홍·유승희·김성곤 의원 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한선교·서상기·정병국·홍일표·김동완·배덕광·이균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윤조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한선교·이종배·서상기·정병국·홍일표·김동완·배덕광·이균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윤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신경민·박광온·신기남·도중환·진선미·원혜영·이해찬·인재근·이종걸·문병호·장하나 의원 발의)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인숙·조명철·김상민·서상기·이명수·황인자·박윤옥·양창영·민현주·임수경·김을동 의원 발의)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민기·황주홍·이춘석·강기정·이찬열·정호준·박민수·장병완·조정식·백재현·전해철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맹우·강길부·이한성·장윤석·이채익·이노근·이만우·정갑윤·정희수·정문헌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인숙·황주홍·한선교·박민수·민홍철·김광진·이명수·황인자·박윤옥·양창영·김동완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15. 6. 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손인춘·정희수·이강후·전하진·송영근·김현숙·이노근·김을동·강기윤·이진복 의원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춘진·길정우·김기준·김성곤·

김영록 · 김우남 · 김학용 · 박민수 · 서영교 · 윤관석 · 인재근 · 임내현 · 주호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제식 · 홍철호 · 김명연 · 민현주 · 박대출 · 김태원 · 이재영 · 염동열 · 류지영 · 조해진 · 김춘진 · 유대운 · 민병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제식 · 홍철호 · 김명연 · 민현주 · 박대출 · 김태원 · 이재영 · 염동열 · 류지영 · 조해진 · 김춘진 · 유대운 · 민병주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인숙 · 황인자 · 박윤옥 · 최봉홍 · 양창영 · 김동완 · 이명수 · 송영근 · 임수경 · 김을동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성곤 · 이개호 · 신정훈 · 김영록 · 황주홍 · 이찬열 · 주승용 · 안규백 · 정세균 · 박주선 · 조정식 · 최민희 · 김춘진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인숙 · 황인자 · 박윤옥 · 양창영 · 김동완 · 이명수 · 송영근 · 민현주 · 임수경 · 김을동 의원 발의)

이상 6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6. 23 정부 제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박영선 · 백재현 · 김경협 · 안민석 · 김윤덕 · 박범계 · 이찬열 · 정성호 · 설훈 · 박기춘 · 도종환 · 김현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5. 6. 23 김민기 · 황주홍 · 이춘석 · 강기정 · 이찬열 · 정호준 · 박민수 · 장병완 · 조정식 · 백재현 · 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4 윤명희 · 김명연 · 김종태 · 문정림 · 신경림 · 안덕수 · 이만우 · 정문헌 · 홍문표 · 이자스민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1 박민수 · 이개호 · 여상규 · 박남춘 · 정청래 · 김성곤 · 김우남 · 신경민 · 김춘진 · 유성엽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5. 1. 14 이종배 · 양창영 · 경대수 · 이이재 · 김우남 · 김승남 · 박민수 · 유승민 · 이한성 · 주호영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2015. 2. 16 유승우 · 노철래 · 송영근 · 이만우 · 김장실 · 강기윤 · 강석훈 · 김광림 · 박명재 · 정우택 · 이학재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서면질문서 제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8항 보완대책에 관한 질문서

(2015. 6. 23 심재철 의원 제출)